

① 적용 대상

- (중대산업재해) 산업재해 중 △사망 1명 ↑ △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↑ △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↑ 발생
 - ※ △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△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 유예(24.1.27 시행)
- (중대시민재해) ①원료·제조물, ②공중이용시설, ③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·제조·설치·관리상 결함 원인, △사망 1명 ↑ △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 10명 ↑ △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 10명 ↑ 발생
 - ① 법률 정의 규정 및 시행령 위임 규정이 없어, 법률 해석에 맡김
 - ② △「실내공기질법」상의 다중이용시설 △「시설물안전법」상의 시설 △「다중이용업소법」상의 다중이용업 영업장 중 바닥면적 1천㎡ 이상인 시설
 - △소상공인 사업장(서비스업 5인 미만)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△교육시설 △공동주택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
 - ③ △도시철도, 철도 중 동력차·객차 △노선여객자동차 중 시외버스 △여객선 △항공기
 - 택시·마을버스· 시내버스, 낚싯배, 1인용 항공기 등은 법률에서 적용 제외

② 사업주·경영책임자등 책임 주체

- (사업주)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,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
- (경영책임자등) △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△중앙행정기관장, 자치단체장, 공공기관장

③ 범죄구성요건

- 사업주·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확보의무에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·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
 - (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)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·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·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(①~④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위임)

④ 처벌 규정

- (법정형) △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(병과 可) △부상·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(5년 이내 재범시 1/2까지 가중)
- (양벌 규정) △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△부상·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
 - ※ 경영책임자등의 고의·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·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짐